

비교정치연구의 분석전략과 디자인

통치생산의 기본규준을 중심으로

김웅진*

1. 서론

현대 정치학의 각 분야는 모두 나름대로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비교정치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시각과 견해의 대립·갈등을 통한 현대 정치학의 이론적·방법론적 진보는 비교정치연구가 주도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비교정치론이란 과연 어떠한 분야이며, 비교분석방법은 정치학 지식의 생산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레이프하트가 다음과 같이 매우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Lijphart, 1971: 682).

……정치학을 이루고 있는 여러 분야 중에서 특별한 연구주제를 지칭한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보다는 유독 방법론적 성향을 띤 명칭을 지닌 것은 비교정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비교정치라는 용어는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지칭하는 것이지 무엇을 다룰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굳이 레이프하트의 견해를 빌지 않더라도, 정치사회현상의 연구는 거의 대부분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비교정치연구가 배타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연구대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무엇을 분석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비교정치론과 정치학의 여타 구성분야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국제관계에 관련된 것이든 혹은 어떤 국가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든 간에 모든 정치사회현상의 생성경로를 일반화하는 작업은 비교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비교정치론은 바로 정치학의 방법론 그 자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¹⁾

물론 좀더 넓은 의미에서 비교정치론은 방법론적 측면 이외에 정치변동론·정치불안정론·정치문화론 등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도출된 정치학적 지식의 집적체라는 이론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비교정치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 제한하여, 우선 비교분석의 목적과 정의를 요약한 다음 핵심적인 분석기준과 절차들을 크게 분석설계(分析設計, comparison designs)와 적정 분석단위의 구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이와 같은 입장에서 알먼드는 “정치학의 한 분야로서 비교정치론을 운위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정치학이 과학이라면 그 접근방법은 당연히 비교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Almond, 1966: 877-878 참조).

2. 비교정치분석의 정의와 목적

비교정치분석은 여타 사회과학의 비교분석과 함께 그 목적과 논리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즉, 비교정치분석은 모든 ‘과학적’ 비교분석이 그러하듯이 연구대상 현상의 생성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통칙(通則)의 생산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싸토리는 비교분석방법을 “인과형 가설, 통칙 내지는 법칙을 가능한 한 다수의 사례에 체계적으로 도입·검증하는 분석방법”(Sartori, 1970: 59)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레이프 하트 역시 비교분석을 “실험방법, 통계분석방법과 함께 변인간의 경험적 관계를 찾아내는 연구방법의 한 가지”(Lijphart, 1971: 682)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비교분석방법은 “변인 사이의 연계법칙(連繫法則)을 도출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이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정치사회체계의 주요 국면이 나타내는 유사성과 상이성의 근거를 밝혀내는 작업”(Merritt, 1971: 3), 혹은 “사회현상에 관한 일반적 진술을 생산해내는 방법”(Przeworski and Teune, 1970: 4) 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과학적 통칙을 생산하는 데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실험방법(實驗方法, experimental method)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존재론적 본질로부터 야기된 여러 가지의 장애요인으로 말미암아 정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연구에 실험의 분석규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알몬드와 젤코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치사회현상은 본질적으로 “결정, 목표, 의도와 같은 인간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관념들이 끊임없이……상호작용함으로써 생성”(Almond and Genco, 1977: 492) 되기 때문에, 분석대상현상의 엄격한 규칙성·반복성·재현성을 가정하고 있는 엄밀과학(嚴密科學, hard science)의 결정론적 실험모형에 따라 그에 관한 통칙을 생산해낼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정치현상의 생성 경로에 개입하는 모든 상황적·심리적 변인들에 관한 완벽한 실험적 통제

(cast-iron control)가 불가능한 이상, 사회과학의 이론화 과정에 실험방법을 어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치학연구에 서는 실험에 준하는, 혹은 실험의 분석논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의사실험 방법(擬似實驗方法, quasi-experimental method)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교분석은 바로 이러한 의사실험방법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분석방법의 핵심적인 목적은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통칙의 생산 혹은 이론화(理論化, theorizing)에 놓여져 있다. 즉, 비교란 통상적으로 개체 사이의 유사성(similarities/동질성, homogeneity)과 상이성(differences/이질성, heterogeneity)을 파악하는 분류작업을 지칭하나, 정치학에서 비교분석은 정치사회현상의 생성과정에 관한 가설이 잠정적으로 확증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선행조건(先行條件, temporal-spatial conditions)의 범주를 귀납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김용진, 1993: 28-29).

만약 어떤 현상의 생성경로에 관한 관찰자의 인식이 특정한 역사적·지역적 조건에서 경험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면, 적어도 그와 같은 조건의 테두리내에서는 통칙을 구성하고 있는 독립변인-종속변인간의 인과관계가 보편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분석을 통한 이론화는 가설성립의 범주를 점차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즉, 가설이 그 속에서 확증되는 비교사례(比較事例, comparison cases)의 숫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러한 가설은 보편적 통칙으로 정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가설을 가능한 한 다양한 비교사례(조건)에 개별적 혹은 교차적으로 대입하여 그 성립여부를 추적하게 되며, 이와 같이 다양한 조건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비교 분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다.

비교정치분석의 두번째 목적은 정치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도식(圖式, taxonomy)을 구축함에 있다(Sartori, 1970: 1036-1040; Scarrow, 1969: Ch. 2; Roberts, 1972: Ch. 3 참조). 즉, 비교사례간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상이성은 이론화 작업의 기초가 되는 개념화(概念化, con-

ceptualization)와 분류(分類, classification)에서 필수불가결한 정보가 된다. 우선 어떤 개체들을 비교하였을 때 발견되는 공통성들은 그러한 개체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속(屬, genus)이 지닌 일반적 속성의 카테고리들 이름으로써 속(屬) 자체의 개념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상이성은 이질적인 속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동질적인 속에 포함된 종(種, species)의 분류를 역시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정치권력체제의 비교는 국가(屬)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며, 다시 국가간의 상호비교는 이들을 권위주의국가, 민주국가 등 몇 가지의 종으로 나눌 수 있게 한다. 물론 여기에서 분류는 특정한 속성의 존재여부에 따른 분류와 그러한 속성의 상대적 혹은 절대적 심도(深度)에 따른 분류 등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세번째로, 비교분석은 이미 생산된 통칙의 설명능력과 적용범주를 재확인 또는 확장토록 한다. 즉, 기존의 통칙이 몇 개의 비교사례들에 대한 교차검증을 통해 도출되었다면, 연구자는 그러한 통칙으로부터 가설을 연역하거나 통칙 그 자체를 가설로 삼아 새로운 조건(사례) 속에서도 통칙이 설명능력을 발휘하는가의 여부를 추적하게 된다.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연구(交叉國家研究, cross-national studies)를 통해 생산된 정치불안정이론이 과연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밝히려 한다면 이 역시 비교분석에 해당된다.

3. 비교정치연구의 분석전략과 디자인

비교정치연구전략에 관한 논의는 크게 보아 적정비교사례의 선정방식 및 종속-독립변인간 인과관계의 추론방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교정치연구전략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最大類似體系分析, 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과 최대상이체계 분

석디자인(最大相異體系分析, the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Przeworski and Teune, 1970: Ch.2; Meckstroth, 1975: 132-157; Lijphart, 1975: 159-177; Frensdreis, 1983: 255-272; DeFelice, 1986: 415-437; Gayle, 1988: 257-280), 그리고 최근 래진이 비교사회연구에 도입한 부울 알고리즘(Boolean Algorithm) (Ragin, 1987: Ch. 6-8 참조)을 중심으로 그 논리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과 최대상이체계 분석디자인

이 두 유형의 분석전략은 모두 변인간의 공변양상(共變樣相, covariance pattern)을 일반화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가설구축과정에서 어떠한 인과관계의 추론 논리를 사용하는가, 둘째, 비교사례 자체가 지닌 속성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리고 셋째, 어떤 사례를 선정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다르다. 한편 이러한 디자인들에서 '체계'(體系, systems)란 연구대상현상이 그 속에서 발생하는 조직·집단·정치체계·국가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체계라는 용어는 교차국가연구에서는 국가, 교차도시연구에서는 도시, 교차계층연구에서는 계층 등 비교사례 그 자체를 지칭하고 있다.

(1)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은 가설 정립에서 이른바 차이법(差異法, method of difference), 좀더 정확히는 부수변이법(附隨變異法, method of concomitant variation) (Hage and Meeker, 1988: 45-48; 스카치폴·소머즈, 1992: 125-130 참조)을 따른다. 즉, 만약 연구대상현상(종속변인)의 양태가 각각의 비교사례 속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면 비교사례간의 유사성으로서는 그러한 종속변인의 변이양태를 설명할 수 없으며, 상이성만을 독립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다(표1 참조).

표1 차이법의 논리

	비교사례 1	비교사례 2	
잠정적인 독립변인 A	A	A	사례간 유사성
잠정적인 독립변인 B	B	B	사례간 유사성
잠정적인 독립변인 C	C	c	사례간 상이성
종속변인 Y	Y	y	

↓

사례간 상이성 C → Y

따라서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은 우선 비교사례의 모집단으로부터 종속변인의 존재양상이 서로 크게 다른 사례들을 잠정적으로 선별한다(종속변인의 사례간 變異極大化). 그 다음으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속성(독립변인으로서 체계속성)의 척도(목록)를 구축한 뒤, 잠정적으로 선정된 사례 가운데에서 다시 이러한 척도에 입각하여 유사성(체계간 유사성, intersystemic similarities)이 극대화되고 상이성(체계간 상이성, intersystemic differences)이 극소화될 수 있는 사례들만을 연구표본으로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한다. 다시 말해서, 가설을 구축·검증하는 데에서 극대화된 유사성은 도출될 통칙의 성립선행조건으로 통제되며(유사성의 常數化), 극소화된 상이성은 독립변인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교정치연구의 주종을 이루어 온 지역연구(地域研究, area studies)는 대부분 이와 같은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 혹은 레이프하트가 주장한 “비교가능사례전략”(比較可能事例戰略, Comparable-cases strategy) (Lijphart, 1975 참조)의 분석논리를 따라왔다고 할 수 있다. 레이프하트에 따르면 비교정치연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과소사례(過少事例)-과다변인(過多變因)’의 문제인데(Lijphart, 1975: 685-691),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은 특히 ‘과다변인’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되어 대부분의 교차국가연구가 이러한 연구전략을 채택하여 온 것이다. 즉, 동일지역이나 문화권내에 포함된 국가들은 “상수(常數)로써 처리하려는 다수의 변인들에 관한 한 서로 유사성을 지니는 반면 상호 연결시키려는 변인들에 관한 한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사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비교사례로 삼아 분석을 수행한다면 “다수의 개입변인들을 통제하는 가운데 소수의 주요 변인 상호간에 나타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에 따라 과다변인의 문제점이 쉽사리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Lijphart, 1975: 687).

(2) 최대상이체계 분석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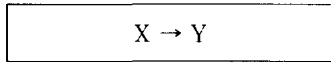
한편 최대상이체계 분석디자인은 유사체계 디자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즉, 최대상이체계 분석 디자인은 유사체계 디자인이 모든 정치사회현상을 그러한 현상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사례(체계)의 속성으로만 설명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독립변인의 분석수준을 어느 한 지점에 고정시키지 않고 교차수준적·다수준적(交叉水準的·多水準的) 분석을 시도한다는 논리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최대상이체계 분석디자인의 논리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우선 사례의 속성(체계속성)은 종속변인의 변이양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잠정적 가정을 세운다. 다음으로 비교사례의 모집단 속에서 일치법(一致法, method of agreement)의 논리에 따라 종속변인의 존재양상이 유사한 사례들을 추적한 후(Hage and Meeker, 1988: 45-48; 스카치폴·소머즈, 1992: 125-130), 그 가운데에서 연구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이러한 연구표본의 무작위 선택은 앞서 세운 가정, 즉 비교사례의 속성은 연구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구표본은 물론 색다른 사례들로 구성된 모집단으로부터 표집되었으나, 가정에 따라 사례 자체의 속성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삼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표2 일치법의 논리

		비교사례 1	비교사례 2	비교사례 3
후보 독립변인	A	A	a	a
	B	b	b	B
	C	c	C	C
	X	X	X	X
종속변인	Y	Y	Y	Y

↓



일단 연구표본이 만들어지면 분석의 수준을 최대한 낮추어 일단의 후보독립변인(候補獨立變因, candidate independent variables)들을 상정한 다음, 그 중에서 다시 각 사례내에서 가능한 한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 변인들만을 뽑아 이들을 최종 독립변인으로 간주한다(표2 참조).

만약 이처럼 “체계 이하의 수준”(Przeworski and Teune, 1970: 34)에서 상정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이 경험적 검증을 통해 입증된다면, 이는 “체계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운 통칙”(Przeworski and Teune, 1970: 39), 다시 말해서 보편적 적용성이 대단히 큰 통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가설이 부정된다면 분석의 수준을 점차 높혀 독립변인이 작동하고 있는 수준을 순차적으로 추적해 나가게 된다. 즉, 유사체계 분석디자인은 독립변인이 비교사례로서 선택된 특정체계(비교사례)의 수준에서만 작동한다는 선험적 가정을 수용하고 있음에 반해, 상이체계 분석디자인은 독립변인이 가장 낮은 개인의 수준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러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집단, 체제, 국가 등 그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든지 작동할 수 있다는 대단히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상이체계 분석디자인은 세보르스키와 튜니가 지적한 바와 같

이 “불필요한 체계변인들을 배제”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Przeworski and Teune, 1970: 35).

2) 부울의 대수학적 연산방식

앞서 소개한 세보르스키와 튜니의 비교분석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변량분석(變量(定量)分析)을 통한 가설의 검증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현상을 초래하는 상황적 조건의 존재 여부를 추적하려는 정성적(定性的) 비교연구(qualitative comparison)에는 거의 적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비교정치론에서는 실제로 정성분석의 논리나 절차가 아직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성분석은 엄밀성이 떨어지는 서술방식(descriptive narratives)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래긴이 부울(George Boole)의 대수학적 연산(代數學的演算) 방식을 비교적 치밀한 정성분석방법의 형태로 비교사회학 연구에 도입하여 정성분석을 통한 과학적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이를 비교정치연구에 적용할 경우 변량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강한 설명능력을 지닌 통찰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agin, 1987: Ch. 6-8; 최병필, 1983: 제10장; 김성태·김영권, 1984: 제2장 등 참조).

부울의 대수(논리·집합대수)는 주로 전산 프로그램의 논리회로설계에 응용되고 있으나, 비교사회학 연구에서는 특정한 사회현상을 초래하는 상황적 조건의 다양한 조합양태를 규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조건조합들과 연구대상 사이의 다중적·다차원적 인과경로(multiple conjunctural causation) (Ragin, 1987: 101)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부울 알고리즘의 기본전제와 절차를 간략히 요약해 보기로 한다.

(1) 기본전제와 법칙

가) 이항변인의 사용

부울의 대수학적 알고리즘은 명목척도(nominal measures)로 이루어진 자료의 분석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즉, 이 방법은 특정한 조건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만을 전달해 주는 변인(측정척도)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척도들은 조건의 존재를 표시해 주는 1(참: True), 그리고 부재를 나타내는 0(거짓: False) 등 두 가지 값만을 지닌 이항변인(二項變因, binary variables)의 형태를 취한다.

나) 진리표의 작성

부울의 분석방법은 이와 같은 이항변인의 행렬(matrix)로 이루어진 진리표(眞理表)를 기초로 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진리표(혹은 진리치표, Truth Tables)란 어떤 논리적 표현이 다른 표현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분석도표를 지칭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작성된다.

첫번째, 우선 연구대상현상(종속변인)과 그러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여겨지는 일단의 조건들(독립변인)을 상정하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반화하기 위한 비교분석사례의 표본을 상정한다.

두번째, 독립변인들의 값(1 혹은 0)이 나타낼 수 있는 조합을 추적한다. 예로써 세 개의 독립변인을 상정하였다면, 이들의 값이 나타낼 수 있는 조합은 0-0-0(부재-부재-부재), 0-0-1(부재-부재-존재), 0-1-0(부재-존재-부재) 등 모두 8개가 된다($2 \cdot 2 \cdot 2 = 8$).

세번째, 이와 같이 찾아낸 독립변인들의 조합양상을 진리표의 행(行, row)으로 제시한다.

네번째, 분석표본 가운데에서 각 행에 표시된 조합양상을 공유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낸 후, 그러한 사례들 속에서 나타나는 종속변인의 양태를 추적하여 1 또는 0의 값을 부여한다. 이때 종속변인의 값은 사례들

이 나타내는 '경향'에 따라 주어진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진리표의 예를 들면 표3과 같다.

표3 진리표의 예

	독립변인 (조건)		종속변인 (결과)	사례의 수
	A	B	P	
제1행	0	0	0	6
제2행	0	1	1	5
제3행	1	0	1	2
제4행	1	1	1	3

다) 합산(논리적 OR)

부울 알고리즘에서 합산(+)은 '혹은'(OR)이라는 논리기호에 해당된다. 예로서 $A+B=Z$ 라 할 때, $A=1(\text{true})$, $B=1(\text{true})$ 일 경우 $Z=1(\text{true})$ 이 되며, $A=1$, $B=0$ 일 때에도 $Z=1$ 이 된다($1+1=1$, $1+0=1$). 이를 풀어 말한다면, A가 1이거나 혹은 B가 1이라면 Z는 1이 된다. 즉, A와 B 가운데 어느 한 조건만 충족되면 Z가 발생한다(표4 참조).

표4 합산의 예

A+B=Z		
A	B	Z
0	0	0
0	1	1
1	0	1
1	1	1

라) 적산(논리적 AND)

여기에서 사용하는 곱셈기호는 산술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즉, 부

울의 곱셈은 적의 합(積의 합, sums of products)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Ragin, 1987: 91), 이때 적(積)이란 독립변인으로 주어진 조건들의 조합양상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곱셈기호는 '그리고'(AND)라는 논리적 표현에 해당된다. 예로서 위의 표4의 제4행에 나타난 독립변인의 조합양상 1-1은 $A \cdot B$ 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A, B라는 상황이 모두 존재한다는 복합적 조건을 지칭한다.

이처럼 곱셈기호를 사용하여 독립변인의 조합양상(기본곱, fundamental products) (Lipschutz, 1988: 242 참조)을 표현할 때에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사용하여 각기 조건의 존재와 부재를 나타내게 된다. 즉, 대문자는 존재(1)를, 소문자는 부재(0)를 지칭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시 위의 표4의 경우를 곱셈으로 표시해 보면 표5와 같다.

표5 적산의 예

제1행	0-0 → a · b
제2행	0-1 → a · B
제3행	1-0 → A · b
제4행	1-1 → A · B

(2) 분석의 절차

위와 같은 네 가지 전제와 공리에 따라 부울의 연산방법이 비교정치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하나의 예를 통해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연구자가 반정부시위가 발생(F)할 조건을 찾아내려 한다. 이 연구자는 독립변인(조건)으로서 급격한 사회유동화(A), 경제적 침체(B), 반정부세력의 조직화(C)를 상정하고, 이들을 이항변인으로 만들어 각 비교사례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 진리표 작성

첫번째 단계는 우선 수집한 자료로 진리표를 작성하는 작업이다. 표를 만들어 본 결과는 표6²⁾과 같다.

표6 반정부시위의 발생조건에 관한 진리표

	독립변인 (조건)			반정부시위 발생 F	사례의 수
	A	B	C		
제1행	1	0	1	1	6
제2행	0	1	0	1	5
제3행	1	1	0	1	2
제4행	1	1	1	1	3
제5행	1	0	0	0	9
제6행	0	0	1	0	6
제7행	0	1	1	0	3
제8행	0	0	0	0	4

나) 기본식의 도출

표6을 보면 반정부시위가 발생한 경우(F=1)는 제1행~제4행에 해당된다. 제5행~제8행은 F=0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 제1행~제4행까지 나타난 독립변인의 조합양상을 적산기호로 표시해 보면,

$$\text{제1행: } 1 - 0 - 1 \rightarrow A \cdot b \cdot C$$

$$\text{제2행: } 0 - 1 - 0 \rightarrow a \cdot B \cdot c$$

$$\text{제3행: } 1 - 1 - 0 \rightarrow A \cdot B \cdot c$$

$$\text{제4행: } 1 - 1 - 1 \rightarrow A \cdot B \cdot C$$

2) 각 수치는 Ragin(1987: 96)에 제시된 진리표에서 인용한 것임.

따라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인과경로를 나타내는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F = (A \cdot b \cdot C) + (a \cdot B \cdot c) + (A \cdot B \cdot c) + (A \cdot B \cdot C)$$

이는 결국 반정부시위를 불러일으키는 조건은 $A \cdot b \cdot c$, $a \cdot B \cdot c$, $A \cdot B \cdot c$, $A \cdot B \cdot C$ 등 네 가지의 조합이며, 이 가운데 어느 조건(조건들의 조합)이든 한 가지만 충족되면 시위가 발생하게 된다.

다) 최고함축요인의 도출과 최종식의 정립

위에서 도출한 기본식은 독립변인으로서 네 개의 기본곱(조건조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다시 적은 수의 기본곱들로 축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만약 어떤 두 가지 조건조합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굳이 두 개의 다른 표현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기본곱으로 최소화(minimize)할 수 있다(Ragin, 1987: 93-95 참조).

예를 들어, 위 식에서 두 개의 기본곱 $A \cdot b \cdot C$ 와 $A \cdot B \cdot C$ 간의 차이 점은 B, (b)뿐이다. 그런데 이들은 B라는 조건의 존재를 상정했거나($A \cdot B \cdot C$) 그렇지 않거나($A \cdot b \cdot C$) 모두 F를 불러일으키는 조건조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B라는 항목은 각 기본곱 속에서 설명능력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이 둘은 $A \cdot C$ 로 축약(최소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B가 존재하든 안하든 $A \cdot C$ 는 F를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축약된 기본곱을 최고함축요인(最高含蓄要因 혹은 基本含蓄體, prime implicants)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부울 대수의 기본정리 가운데 한 가지인 흡수법칙³⁾을 이용해서 쉽게 도출될 수 있다.

3) 혹은 리던던스(redundance)의 법칙(Lipschutz, 1988: 245-247 참조).

흡수법칙

$$\begin{array}{l} A \cup (A \cap B) = A \\ A \cap (A \cup B) = A \end{array} \quad \rightarrow \quad \begin{array}{l} A + (A \cdot B) = A \\ A \cdot (A + B) = A \end{array}$$

집합의 논리에 의거한 흡수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다. 부울 연산에서는 어떤 식이 포함하고 있는 기본곱 P-2가 다른 기본곱 P-1의 부분집합이라면 P-1은 P-2를 함축(含蓄, imply)하고 있다고 본다. 다시 위 표6을 예로 들어 본다면, 기본곱 ABC는 AB로 함축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AB는 급격한 사회유동화와 경제침체현상이 나타난 모든 국가를 포괄하나, ABC는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반정부세력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만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AB의 부분집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함축논리에 따라 기본식이 포함하고 있는 기본곱들을 최고함축요인으로 최소화해 보면,

$$\begin{array}{l} A \cdot B \cdot C + A \cdot B \cdot c = A \cdot B \\ \text{(따라서 } A \cdot B \text{는 } A \cdot B \cdot C \text{와 } A \cdot B \cdot c \text{를 함축)} \\ A \cdot b \cdot C + A \cdot B \cdot C = A \cdot C \\ \text{(따라서 } A \cdot C \text{는 } A \cdot b \cdot C \text{와 } A \cdot B \cdot C \text{를 함축)} \\ A \cdot B \cdot c + a \cdot B \cdot c = B \cdot c \\ \text{(따라서 } B \cdot c \text{는 } A \cdot B \cdot c \text{와 } a \cdot B \cdot c \text{를 함축)} \end{array}$$

따라서 축약되지 않은 기본식을 도출한 최고함축요인을 이용하여 다시 만들어 보면,

$$F = A \cdot B + A \cdot C + B \cdot c$$

그런데 여기에서 $A \cdot B \cdot C$ 는 이미 $A \cdot C$ 로, 그리고 $A \cdot B \cdot c$ 는 $B \cdot c$ 로 함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조합 $A \cdot B \cdot C$ 와 $A \cdot B \cdot c$ 를 함축하는

첫번째의 최고합축요인 A · B는 순수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복적(redundant)인 것이다. 이처럼 중복적인 최고합축요인들을 제거하고 필수불가결한 것들만을 도출하는 손쉬운 방식으로서 흔히 최고합축요인표(最高含蓄要因表, prime implicant chart)를 사용한다(표7 참조)(Ragin, 1987: 97).

표7 최고합축요인표

기본표현

		ABC	Abc	ABc	aBc
최고 합축 요인	AC	○	○		
	AB	○		○	
	Bc			○	○

표7에서 ○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 최고합축요인으로 합축되는 기본표현들을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요인표로부터 중복되지 않는 필수불가결한 최고합축요인들만을 선별하여 최종적인 부울의 식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F = A \cdot C + B \cdot c$$

즉, 이 공식에 따르면 반정부시위는,

A · C : 급격한 사회유동화와 반정부세력의 조직화라는 두 가지 조건의 조합

B · c : 경제침체와 반정부 세력의 비조직화라는 두 가지 조건의 조합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충족되어도 발생하게 된다.

결국 부울의 대수학적 분석은 첫째, 진리표의 작성, 둘째, 기본곱들의 최소화를 통한 최고합축요인의 도출, 셋째, 최고합축요인표를 이용한 중복적 최고합축요인의 제거, 넷째, 최종식의 정립이라는 네 단계를 통

해 이루어진다. 즉, 이 접근법은 비교분석자료로 특정한 결과(현상)를 초래하는 조건들의 조합양태를 논리적으로 최소화한 공식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의 도출: 드 모르강의 법칙

앞서 제시한 분석논리들은 특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조건의 도출에 맞추어져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연구의 목적이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을 찾아내는 데 놓일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의 도출은 드 모르강의 법칙(De Morgan's Law) (Lipschutz, 1988: 240; Ragin, 1987: 98-99)을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다.

드 모르강의 법칙

$$\begin{array}{l} (A \cup B)' = A' \cap B' \\ (A \cap B)' = A' \cup B' \end{array} \quad \rightarrow \quad \begin{array}{l} (A + B)' = a \cdot b \\ (A \cdot B)' = a + b \end{array}$$

위의 법칙을 앞서 도출한 최종식 $F = A \cdot C + B \cdot c$ 에 적용할 때, F가 발생하지 않을 조건은 이러한 식의 표현양식을 전부 뒤집음으로써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존재를 부재로, 부재를 존재로, 그리고 합산(OR)을 적산(AND)으로, 또 적산은 합산으로 바꾸게 된다. 이렇게 표현양식을 뒤집어 보면,

$$f = (a + c) \cdot (b + C) = a \cdot b + a \cdot C + b \cdot c + c \cdot C$$

여기에서 $c \cdot C$ 는 배제되는데, 그 이유는 C라는 조건이 존재하면서 부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1) 급격한 사회유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제침체현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 2) 급격한 사회유동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반정부세력이 조직화되었다는 조건, 3) 경제침체현상도 존재하지 않고 반정부세력도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조건 등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어도 반정부시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부울의 대수학적 알고리즘은 특정한 사회현상을 초래하는 상황적 조건의 다양한 조합양태를 규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조건조합들과 연구대상현상 사이의 총체적(holistic) 인과경로(Ragin, 1987: 101)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인과구조의 양상을 규명하는 데 개입변인들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가운데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간의 다차원적 인과관계를 패쇄적 모형을 통해 추적하려는 정량분석방법에 비해 좀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일단의 정리를 이용하여 도출된 조건조합들을 논리적으로 최소화(축약)하여 ‘핵심적’ 요인들만을 선별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 현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조건’이나 현상발생의 필요충분조건⁴⁾ 역시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4. 비교분석의 적정단위

비교사회연구는 교차사례적 등가성(等價性, cross-cases equivalence)을 지닌 개념과 지표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과거 비교정치분석에 동원된 개념들은 문화적 서구편향성(西歐偏向性)으로 말미암아 교차문화분석이나 교차국가분석에 요구되는 초문화성(超文化性, transcultural quality)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Dogan and Pelassy, 1984: 5-11 참조). 또한 비록 어느 정도의 보편적 적용성을 갖춘 개념이었다 할지라도, 경험적 함의(經驗的 含意, empirical import)가 크게 부족해서 과학적 비교

4) 여기에서는 이러한 필요충분조건의 도출논리는 생략하였다(Ragin, 1987: 99-101 참조). 또한 진리표의 작성과정에서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건조합들의 처리방식에 관해서는 Ragin, 1987: pp. 113-118을 볼 것.

분석에 요구되는 자료용기(data containers)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분석의 단위와 관련된 방법론적 논의의 핵심은 이론적 외연성과 경험적 내포성을 균형있게 갖춘 등가지표(等價指標, equivalent measures)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모아지게 된다.

1) 외연성과 내포성

비교분석과정에서 사용개념의 외연성(일반성)을 확장시키면 시킬수록 그러한 개념이 지닌 내포성(실측성·실증성)이 축소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보편적 적용성과 실측성을 균형있게 갖춘 개념을 정립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싸토리는 과거의 비교정치연구가 무분별한 개념확장(概念擴張, conceptual stretching) 또는 개념이용(移用, conceptual travel)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주로 구조기능이론에 입각한 기존의 거시적 비교연구들은 외연성만 무리하게 확장된 나머지 내포성을 크게 상실한 공허한 개념들을 만들어 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Sartori, 1970: 1035),

……(과거 비교정치연구의) 커다란 결점은 무한정성을 지닌, 다시 말해서 범위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적절히 정의되지도 않은 개념들을 생산해냈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보편적’ 범주들, 즉 시공을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개념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개념들이 가등가성(假等價性, pseudoequivalence)만을 확보해 주는 ‘무차이’(無差異) 범주에 불과하다면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다. 또한 비록 보편개념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들은 반드시 경험적 보편개념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어떤 개념이 비교분석에서 유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경험적인 정보전달능력과 보편적 적용성을 모두 지닐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추상화 사

다리'(ladder of abstraction) (Sartori, 1970: 1044 참조)의 중앙에 위치한 중간 수준개념(中間水準概念, medium level concepts)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외연성과 내포성이 균형을 이룬 중간수준개념들은 과학적 연구의 기본목표인 일반화와 분류를 모두 가능케 하므로, 이들을 사용한 '역내분석'(域內分析, intra-area comparisons)⁵⁾을 시도한다면 비록 완벽한 보편이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설명능력과 일반성을 고루 갖춘 중범위이론(中範圍理論, middle-range theories)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등가성

등가성은 비교분석에 동원되는 개념이나 측정지표의 타당성(妥當性, validity)을 지칭하는 것이다(Chandler and Chandler, 1974: 28-35 참조). 물론 측정지표의 타당성 문제는 모든 과학적 연구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특히 속성이 다른 사례들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비교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첫번째로,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들이 과연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지녔는가를 판별하는 척도의 타당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교차사례분석에서는 비교대상 사이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명확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척도와 기준을 구축해야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대상의 다양한 존재양식에 알맞은 형태의 잣대'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사례 속에서조차 다차원적 속성을 나타내는 정치사회현상을 교차사례적으로 추적하려 한다면 동일한 척도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 및 공간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즉, 척도의 정확성을 기하면 기할수록 비록 측정결과와 신뢰성은 제고된다 하더라도 측정가능사례(척도가 타당

5) 여기에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정치체제"들을 한데 묶는 지역적 범주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Sartori, 1970: 1046).

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의 범주가 더욱 좁아지게 된다. 즉, 레이프하트가 지적한 “과소사례”(過少事例)의 문제(Lijphart, 1971: 685-691 참조)와 지표의 포괄성(혹은 내용타당성, content validity) 문제가 더욱 확대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교분석에서는 비교대상의 존재양상이 사례간에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동일한 이론적 맥락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그들을 타당한 측정지표로 간주하게 된다.

두번째의 문제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교차사례적으로 비교하려 할 때에 발생한다. 즉, 특정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비교분석을 통해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가 모든 비교사례 속에서 동일한(혹은 적어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관계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러한 차이는 각 사례 속에 변인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고유한 제3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러한 간섭변인들을 추적·통제하는 수단이 추가로 강구되어야 한다(Przeworki and Teune, 1966-67: 554-555).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등가지표는 대개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구축된다. 우선 모든 비교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후보지표군(候補指標群)을 상정한다. 두번째로, 동질성 검증법(Measure of Test Homogeneity)⁶⁾을 이용하여 상정된 지표군으로부터 교차사례적 동질성이 확보된 지표(同一指標, identical measures)들을 추출한다. 세번째로, 도출된 동일지표와 상관관계를 갖는 지표들을 각 사례별로 추적하여 이들을 등가지표로 간주한다. 예컨대 비교사례로 선정된 정치체제 S1, S2에서 속성 P를 측정하기 위한 등가지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Przeworski and Teune, 1966-67: 557-559).

1) S1, S2내에서 속성 X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지표로서 x_1 , x_2 , x_3 …… x_n 을 상정한다.

6) 동질성 검증법에 관해서는 Scott(1966: 751-757), Przeworski and Teune(1966-67: 557 각주 5) 참조.

2) S1, S2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지표군 X_k , 그리고 각기 독특하게 존재하는 지표군 X_{n-k} 를 찾아낸다(즉, S1, S2에는 X_k 와 X_{n-k} 로 이루어진 지표집합 X 가 존재한다).

3) 지표군 X_k 가 교차사례적으로 동질적이라면 그에 포함된 지표 $x_1, x_2, x_3 \dots x_k$ 는 동일지표로서 간주된다.

4) S1, S2에서 X_k 와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 $x_{k+1}, x_{k+2}, x_{k+3} \dots x_n$ 를 찾아내어 등가지표로서 간주한다.

5. 결론

오늘날 비교정치연구는 적어도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기본방향이 정립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엄밀과학(嚴密科學)의 분석규준을 정치현상의 본질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을 통해 여과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였음에 따라 나타난 '전포괄적 보편법칙'(全包括的 普遍法則, covering law)의 맹목적 추구는 단지 모호한 개념과 검증될 수 없는 가설만을 생산해냈다는 비판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른바 '과학적 비교분석'을 통해 정확히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이론적·방법론적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다.⁷⁾ 그 결과 비교분석의 시간적·공간적 맥락을 '통제가 가능한 범주'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합의가 산출되었으며, 이와 같은 합의의 테두리내에서 우선 적정비교사례의 선정 및 일반화의 방식으로서 최대유사체계 분석전략 및 최대상이체계 분석전략이 각기 제시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 두 연구전략의 논리가 동일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른바 혼합체계분석전략(混合體系分析戰略, mixed systems design) (Frendreis, 1983: 260-268)이 주창되었고, 더 나아가 정성적

7) 예로서 LaPalombara(1970: 123-150), Benjamin(1977: 475-483), Almond and Genco(1977) 등을 참조할 것.

비교분석을 위한 부울 연산법(演算法)이 사회학 연구에 정착되어 곧 정치학 연구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방법론적 성찰과 비판이 이루어졌다 해서 과학적 비교분석의 필요성이 최초로 대두된 당시 비교정치학자들을 사로잡았던 ‘일반이론의 정립’이라는 야심적 목표가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다. 즉, 그와 같은 목표를 과학적 성역에 잠시 감추어 놓은 가운데, 일반이론을 점진적·단계적으로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비록 적용범주가 협소하다 하더라도 주어진 조건에서는 강한 설명능력을 발휘하는 협범위이론(狹範圍理論, narrow-gauge theories) 내지는 중간범위이론(中間範圍理論)을 우선 도출하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비교정치학자들은 연구결과가 점차 축적되고 또 그러한 연구결과가 맨 처음 가졌던 과잉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엄밀과학의 분석도구를 일단 마분지로 흉내내 놓고 보면 언젠가는 진짜가 되리라는” 막연한 바램(Almond and Genco, 1977: 504), 혹은 사토리가 엄중하게 비판한 “무의식적 사색(無意識的 思索)”(Sartori, 1970: 1033)으로부터 점차 탈피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정치연구는 오늘날에 이르러 비록 기대한 것만큼 장성하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자란 청소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기본적인 분석시각과 연구목표가 전환됨에 따라 비교분석의 적정단위와 수준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역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현상의 속성을 실증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이론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내포성(內包性)과 외연성(外延性)이 균형을 이룬 개념과 지표들을 정립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물론 교차사례적 일반성과 실측성을 고루 갖춘 등가지표(等價指標)들이 아직 완벽하게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이와 같은 지표들을 구축하는 논리와 방식에 관해서는 일단 기본방향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비교분석이 과학적 정치이론의 모색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1950년대 초엽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비교

정치연구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분석디자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설검증기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급속한 방법론적 진보가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보의 배후를 살펴보면, 비교정치연구가 당면한 이론적 난관은 방법론적 돌파구를 모색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일종의 묵시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사실 비교정치라는 분야는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한 방법론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견해에 따라서는 정치학의 연구방법론 그 자체로 여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비교정치론의 발전과정에서 새로운 분석전략이나 타당한 분석단위의 구축방식 등 주로 방법론적인 문제들이 논의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연구방법체계는 어디까지나 존재론적 입장에 따라 그 기본규준과 논리가 짜여지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존재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에 대한 방법론적 치유책을 찾아내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참고문헌

김성태·김영권

1984, 《전산수학》, 서울: 상조사.

김용진

1993, 《비교정치연구의 논리》, 서울: 전예원.

최병필

1983, “제10장 속과 부울대수”, 《전산수학》, 서울: 대은출판사.

테다 스카치폴·마가렛 소머즈(임현진 역)

1992, “거시사회연구에 있어서 비교사의 유용성”, 《비교정치론강의 1》, 김용진·박찬욱·신윤환 공편역, 서울: 한울.

Lipschutz, S. (안사명 역)

1988, 《전산수학》, 서울: 정의사.

Almond, Gabriel A.

1966, “Political Theory and Political Scienc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0.

Almond, Gabriel A. and Genco, Stephen

1977, “Clouds, Clocks, and the Study of Politics”, *World Politics* 29.

Benjamin, Roger

1977, “Strategy and Methodology in Comparative Research”,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9.

Chandler, William M. and Chandler, Marsha A.

1974, “The Problem of Indicator Formation in Comparative Research”,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7.

DeFelice, E. Gene

1986, “Causal Inference and Comparative Method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9.

Dogan, Mattei and Pelassy, Dominique

1984, *How To Compare Nations, Strategies in Comparative Politics*, Chatham and New Jersey: Chatham House.

Gayle, Dennis J.

1988, "Applying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Comparing Development Policy in Alabama and Jamaic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1.

Hage, Jerald and Meeker, Barbara Foley

1988, *Social Causality*, Boston: Unwin Hyman.

Frendreis, John P.

1983, "Explanation of Variation and Detection of Covariation, The Purpose and Logic of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6.

LaPalombara, Joseph

1970, "Parsimony and Empiric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The Methodology of Comparative Research*, eds. by R.T. Holt and J.E. Turner, New York: Macmillan.

Lijphart, Arend

1971,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1975, "The Comparable-cases Strategy in Comparative Research",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8.

Meckstroth, Theodore W.

1975, "'Most Different Systems' and 'Most Similar Systems': A Study in the Logic of Comparative Inquir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8.

Merritt, Richard L.

1971, *Systematic Approaches to Comparative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Przeworski, A. and Teune, H.

1966-67, "Equivalence in Cross-National Research",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30.

1970,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New York: Wiley.

Ragin, Charles C.

1987,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oberts, Geoffrey K.

1972, "The First Problem: Conceptualization", *What is Comparative Politics*, London: Mcmillan.

Sartori, Giovanni

1970,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Scarrow, Howard A.

1969, "Description through Comparison: Classification, Typologies, Rankings, and Survey", in *Comparative Political Analysis: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and Row.

Scott, W. A.

1966, "Measures of Test Homogene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